남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포럼

일시: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강원일보 1층 스튜디오

발표자: 변상철(평화박물관 연구위원)

1. 남북귀환어부 개요

남북귀환어부란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의 경비정¹⁾에 의해 납치당하거나 조업을 마치고 출항 지역으로 귀항하는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북한에 수일에서부터 수년까지 머문 후 귀환한 어부들을 말한다.

북한이 남한의 어선을 적극적으로 나포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7. 11. 이후이다. 당시 남한은 동해상의 어로저지선을 38도 26분에서 1957. 11.부터 휴전선(38도 36분 45초) 바로 아래인 38도 35분 45초로 변경하였다. 그러자 어선들이 휴전선 바로 아래에서 조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어선의 나포가 쉬워졌다.²⁾ 북한은 이와 관련 12해리 북한영해를 주장하며 남한 어선들을 적극적으로 나포하였다.³⁾

남한정부는 북한의 어선 나포에 대한 대응으로 동해상에서 어로저지선을 남하시키거나, 1958.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4.5마일 아래에 어로저지선을 설치하고 어로저지선을 월선한 선원들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⁴⁾ 하지만 어로저지선을 남하시키는 것은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⁵⁾ 국가보

1) 남북귀환어부들은 어선을 납치해 가는 북한경비정을 작전선 또는 쾌속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2) 1957년 남북어선 수는 동해 9척 서해 4척이고, 1958년 남북어선 수는 동해 9척 서해 20척이다. 출처:〈동해안 어로저지선 변경에 관한 건〉, 제출자 국방부 장관, 1959. 10. 17. 국무회의

3) 권혁철, 『한겨레 21』2003. 6. 5.

4) 1959. 10. 17. 국무회의 의결,〈동해안 어로저지선 변경에 관한 건〉제출자 국방부장관, 1959. 11. 1.부터 동해 어로저지선을 북위 38도 30분으로 변경하고, 어로저지선을 침범한 어선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한다고 의결하였다.

안법으로 처벌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⁶⁾

1967. 1. 19. 어로저지선을 지키던 해군함정 56호가 북한의 지상포대의 포격으로 침몰(승무원 39명 사망)하였고, 1968. 1. 23. 원산 앞바다에서 미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납치(북한은 영해를 침공하였다고 주장 함)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은 1967. 1. 19. 어로저지선을 1마일 남하(38도 34분 45초)시켰고, 이어 1968. 11. 25. 어로저지선을 어로한계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북위 38도 30분⁷⁾으로 다시 남하시켰다.

내무부는 1968. 11. 9. 어로저지선을 넘는 어부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군사경계선을 넘는 어부는 반공법위반으로 모조리 구속하라고 지시⁸⁾하였고, 같은 해 12. 25. 대검찰청 공안부(담당 한옥신 검사)는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 중 두 번 이상 납북된 어부에게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지방검찰청에 지시하였으며, 귀환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장신고를 했을 때와 불완전신고를 했을 때는 간첩 또는 간첩미수죄를 적용하도록 지시하였다.⁹⁾ 내무부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일선 수사기관은 ‘구속을 원칙’으로 납북귀환어부들을 수사하였다.

납북귀환어부들은 대부분 북한에 납북되어 있는 동안 평양여관 등 북한의 건물 각 호실에 2-3명씩 수용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원에게 1명씩 불러나가 가족관계, 거주지 위치, 거주지 주변 경비상황 및 관공서 위치, 친구관계 등을 조사받고 진술하였다. 또 단체로 북한의 우월성, 김일성의 항일운동 사항, 미국이 남한에 끼친 피

5) 해군은 1959. 12. 22. 어로저지선을 북위 38도 33분으로 확장하였고, 1962. 1. 1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어로저지선이 군사분계선에서 2km 남쪽(북위 38도 35분 45초)라고 기재되어 있어 묵시적으로 이선을 어로저지선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농림부 예규 제32호에는 1964. 6. 16. 어로저지선을 북위 38도 35분 45초로 고시되어 있다.

6) 납북어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을 적용시키려면 '제1조 국가 또는 정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자, 제5조 반국가단체를 자진 지원할 목적으로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위원회에서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67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7) 이후 상기 어로한계선은 1989. 4. 13. 북위 38도 33분으로 확장되기까지 유지 되었다.

8) 『동아일보』, 1968. 11. 9.

9) 『조선일보』, 1968. 12. 25.

해, 남한의 문제점 등을 교육받았고, 영화 관람과 김일성대학, 모란봉, 백두산, 금강산 등을 관광하였으며, 집단농장, 트랙터공장, 건설현장 등을 견학하였다. 귀환시는 다시 개별적으로 불려가 감상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도원으로부터 ‘남한에 귀환하면 북한에서 생활한 것에 대해 남한 사람들에게 홍보하라’, ‘북한 사람이 남한에 내려가면 접선하라’ 등의 교육을 받았으며, 쌀과 옷감, 청어, 술, 과자, 납북시그물이 망가진 그물 값 등을 수수하여 귀환하였다.

남한에 도착한 어부들은 도착 즉시 대부분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고, 합동신문을 받았으며, 다시 선박주소지 경찰서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1967년 이후부터는 대다수가 수산업법이나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거나 구속되어 형을 살고 나온 납북귀환어부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속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였다¹⁰⁾.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순화교육의 일환으로 유명 산업시설 등을 견학하였고, 북한을 비방하는 반공교육 강사(또는 쫓기대회 연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귀환 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납북귀환어부들은 북한에서 지낸 생활과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 모두 자백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가족들에게까지도 북한에서 지낸 생활에 대해 비밀로 하라는 지시와 만약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속당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수많은 납북귀환어부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 후 다시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수사기관이 불법구금, 구타, 고문 등을 통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납북어부 기초사실 조사

가. 수산업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자 기초사실 조사 현황

10) 수사기관은 ‘납북귀환어부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사찰하여 기재한 후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1) 조사경위

1987. 4. 29. 열린 국무조정실 남북전략기획단 회의문건¹¹⁾에 첨부된 「연도별 해상 남북 및 송환통계」에는 1954.부터 1987. 4.까지 남북된 어선과 선원은 모두 459척 3,651명이며, 이 중 27척 403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¹²⁾

【남북귀환어부 현황표(척/명)】

연대별	남북선박 및 어부	미귀환 선박 및 어부
1954~1960	99/675	2/35
1961~1970	314/2,236	16/241
1971~1980	40/639	8/115
1981~1987	6/101	1/12
합계	459/3,651	27/403

※ 상기 남북선박 및 선원 중 5척이 침몰하고 16명이 사망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통계자료는 입수하였으나 구체적 명단은 입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1,327명의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자 판결문 4,085쪽을 입수하여 정리한 후¹³⁾, 이 중 1,028명¹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남북귀환어부 피해사실 관련 2009. 기초사실조사”를 2009. 3. 26.부터 동년 7. 20.까지 4개월간 실시하

11) 1987. 1. 15. 남북된 제27동진호 선원에 대한 국무조정실 전략기획단 대책회의로 2009. 8. 6.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하였다.

12) 한편 1987.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남북.귀환 선박 및 어부현황」에는 1954.부터 1987.까지 남북된 어선과 선원은 459척, 3,648명이고, 이 중 미귀환 어선과 선원수는 33척 418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남북귀환어부 통계수치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치안본부 작성 남북귀환어부 현황표]

구분 년도	남 북			귀 환			미귀환(누계)		
	계	동해	서해	계	동해	서해	계	동해	서해
계(척/명)	459 3,648	165 1,527	294 2,121	426 3,230	155 1,364	271 1,866	33 418	10 163	23 255

13) 대다수의 남북귀환어부들은 반공법 제6조1항(탈출) 및 수산업법 제15조(어업의 제한조건), 제71조(어로저지선일선조업)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14) 나머지 300명은 “2008. 기초사실조사” 완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어서 조사하지 못하였다. 2008. 기초사실조사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 대해서만 2008. 4.~11.까지 진행하였다.

였다. 15)

2009. 기초사실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조사 수행 인력의 선발(일용인부 편성)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진실화해위원회와 시·군·구 과거사 담당 공무원이 점검,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간첩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진술을 청취하였다.

2) 조사현황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산업법 및 반공법 위반자 1,028명에 대해 판결문상 적시되어 있는 본적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배부하였으나¹⁶⁾,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사항 조회결과 본적지 불명확, 본인 및 친족사망, 타 시도전출 등으로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아 1987년 치안본부 통계 3,648명 중 최종적으로 확인된 660명에 명단을 재배부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 191명, 인천 51명, 전라북도 36명, 전라남도 32명, 경상북도 60명, 경상남도 28명으로 총 352명에 대하여 「납북귀환어부 개인별 피해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였다¹⁷⁾.

【납북귀환어부 피해현황 조사표】

시·군별	납북귀환어부 피해 조사			
	조사대상 (A)	면담자 (C)	채취 조사표(B)	채취율 (B/C, %)
총계	660	415	352	84.82

15) 추진근거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제33조제2항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제12조제2항 “위원회는 기초사실의 조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

16) 지역자치단체별 인원배부 현황은 인천 중구 10명, 인천옹진 55명, 속초 218명, 양양 9명, 고성 313명, 강릉 78명, 동해 61명, 삼척 1명, 홍성 1명, 군산 102명, 진도 16명, 여수 55명, 울릉도 17명, 영덕 29명, 포항 32명, 양산 4명, 남해 27명이다.

17) 납북귀환어부 개인별 피해현황 조사표에는 납북귀환어부 면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사건내용, 피해사실, 피해일시, 피해형태, 피해장소, 피해유형, 가해자, 관련자 정보, 피해신청여부 및 이유, 2차 피해, 관련자료 소장여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천	62	51	38	74.51
중구	7	6	6	100.00
옹진군	55	45	32	71.11
강원도	445	191	158	82.72
속초시	216	38	15	39.47
양양군	3	3	3	100.00
고성군	74	64	54	84.38
강릉시	84	40	40	100.00
동해시	68	46	46	100.00
전라북도	30	36	36	100.00
군산시	30	36	36	100.00
전라남도	38	32	32	100.00
여수시	22	9	9	100.00
진도군	16	23	23	100.00
경상북도	57	77	60	77.92
울릉군	12	32	15	46.88
포항시	15	15	15	100.00
영덕군	30	30	30	100.00
경상남도	28	28	28	100.00
남해군	28	28	28	100.00

3) 조사결과

위 납북귀환어부 피해현황 조사표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수하여 검토한바, 납북귀환어부의 대부분이 1960. 말경부터 1970. 초경까지 서해와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고,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년이 넘도록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하였으며, 귀환 후 수사관들로부터 월선조업 및 탈출혐의, 군사기밀 누설혐의, 지령사항 수수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수산업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어로저지선이나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고 남한해상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북한경비정이 남하하여 납치해 갔음에도, 수사기관이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북한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 구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석방 후에도 기관원들에게 수시로 감시를 당하고 취업제한, 거주지이전 제한, 연좌제로 인한 가족 및 친척들의 취업 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혐의도 없이 수사기관에 다시 불려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간첩으로 활동한 사실을 자백하라는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납북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최정남(현 백령도 두무진 어촌계장)은 “1970년 납치 당시에는 장춘빈씨 어선에 승선한 사람들 중 1명이 총을 맞아 사망하였고 나머지 승선자 4명은 북한에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배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그래서 마을 앞에 추모비를 세웠다¹⁸⁾” 고 진술하였다.¹⁹⁾

한편 미귀환 납북어부들에 대한 진술도 청취하였는데, 김만술은 “본인과 함께 납북된 사람은 16명인데 그 중 7명이 미귀환하였다. 그들이 미귀환한 이유는 밤에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사과를 가져다주고 이야기도 하다 갔는데 아마 그들에게 유혹되어 남한으로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그 여자들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에 남을 뻔하였다” 고 진술하였다.²⁰⁾

현재 납북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¹⁾」에 의거하여 설치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

18) 백령도 두무진에 세워진 「반공희생자합동위령비」에는 “1970년 7월 9일 23시경 군사분계선 남쪽 4마일 해상에 갑자기 나타난 북한괴뢰함정은 평화롭게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 어부들에게 발포를 가하면서 어선들을 북으로 나포해가다 이때 북괴에 잡혀가지 않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으로 뱃줄을 끊고 도망하려던 최상일은 저들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고 장춘빈, 민경신, 변호신, 사명남 등 4명은 북괴로 끌려가기 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 항거하겠다고 귀중한 생명을 바다에 던져 반공정신의 투철한 면을 보여주다 이러한 사연은 9개월간이나 억류되었다가 동료어부들이 자유대한의 품으로 귀환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입수한 수산업법 및 반공법 위반 판결문에는 위 관련자의 명단은 없는 것으로 보아, 납북 귀환 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9) 2009. 5. 21. 진술청취.

20) 2009. 6. 7. 진술청취.

2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납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회”에서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²²⁾. 그러나 기초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동법 제2조 2호과 동법 제2조 제3호에 적용되어 납북피해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사실조사에서 확인된 몇몇 납북귀환어부들은 위 위원회에 접수를 하였으나 “납북피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우리는 단식까지 하면서 목숨 걸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는데, 국가는 우리에게 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하였고, 당시 북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이제는 납북피해자라고 보상하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라고 진술하였고, 소수 일부만이 ‘추후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또는 ‘신청접수를 하여도 진실규명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다.²³⁾

다음은 기초사실조사 과정에서 면담한 일부 납북귀환어부들의 사건 사례 및 자료조사이다.

가) 김용운 사건 사례²⁴⁾

(1) 사건개요

김용운은 월진호 선장으로 선원 이일생, 김춘서, 김동환, 안수이, 이춘성, 전금석과 함께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를 잡던 중 1968. 11. 1.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납되었다가 1969. 5. 28. 귀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위반,

22) 2008. 4. 29. ~ 2009. 6. 4.까지 265건을 심의하여 9,092,726,840원의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23) 조사표에 미신청 사유를 기재한 250명 중 위원회의 존재를 몰라서라고 답한 사람은 205명이고, 추후 다시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라고 답한 사람은 16명, 신청접수를 하여도 규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한 사람은 17명, 손해배상이 없으므로 라고 답한 사람은 12건이다.

24) 2009.7.2. 진술청취.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수산업법위반만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였으나 기각당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만기복역 후 출소하였다.

(2) 주요 진술내용

김용운은 “1968. 11. 1. 신불 앞(통일전망대 부근)에서 100여척의 남한 어선들과 함께 명태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경비정이 총을 쏘고 나타나자 남쪽으로 도망을 하였지만 따돌리지 못하고 붙잡혀 피납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김용운은 "북한에 잡혀갔다가 귀환하자마자 고성경찰서에 연행되어 약 15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들은 나에게 북한에서 생활했던 것과 납치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납치된 지점은 남한해상인 신불 앞이라고 하였고, 북한에서는 좋은 곳을 구경도 했으며 교육도 받았다고 모두 말하였다. 그러자 고성경찰서 박형사가 '당신들이 남한해상에서 납치되었다고 말하면 고성경찰서장이나 진해해군사령관 등이 다친다.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매 맞지 말고 그냥 (북한해상에서 조업 중 피납되었다고)시인해라'라고 했다. 또한 고성경찰서 형사들이 '북한에서 무슨 지령을 받고 왔냐'하면서 주먹으로 빵을 때리고, 구두로 정강이를 차고, 각목으로 구타하였다. 그래서 형사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용운은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속초에 있는 검찰청에 넘어갔는데, 검사가 범죄혐의가 사실인지 물어서 '경찰관이 남한해상에서 납치되었다고 하면 고성경찰서장이나 진해해군사령관이 다치니 북한해상에서 납치되었다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가 형사에게 기록을 던지면서 '이러면 안된다, 다시 조사해라'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다시 고성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박형사가 고성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검사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먹으로 빵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하였다. 그리고 조서를 가지고 오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글을 읽을 줄 몰랐고, 형사가 읽어주지도 않음) 지장을 찍었다. 그리고 다시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고, 판사에게도 두려움에 북한해역에서 고기를 잡다가 피납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용운은 "만기 복역하고 석방된 뒤에도 서울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지 않았냐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끝나자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으며, 차비로 2,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보안대와 고성경찰서에도 자주 불러 다니며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안정호 사건 사례²⁵⁾

(1) 사건개요

안정호는 1980. 8. 30. 제2남진호에 선장 이성원의 선원 18명과 함께 승선한 후 속초항을 출항하여 동해상에서 오징어를 잡았으며, 동년 9. 6.경 만선이 되자 속초항으로 귀항하다 북한경비정에 피납되어 254일이 지난 1981. 5. 20. 귀환하여 속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²⁶⁾

(2) 주요 진술내용

안정호는 "저희를 납치한 북한군들이 납치지점을 북방한계선 남방 6마일 지점이라고 말해주어 선원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귀환하여 돌아와 속초에 있는 한양여관 방 하나에 한명씩 수용되어 조사를 받을 때 북방한계선 남방 6

25) 2009. 7. 1. 진술청취.

26) 안정호는 1985. 1.경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다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1985. 8. 2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1985.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기밀탐지, 회합 등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찬양고무죄로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6. 4. 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마일 지점에서 납치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너희들이 남한해상에서 납치되었다고 하면 북한경비정이 넘어왔는데도 지키지 못했다고 징계를 당하니 너희들이 북한해상에 넘어갔다고 하자'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해주고 석방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였다. 석방 후 약 1년 쯤 지나 우연히 선장(이름은 기억나지 않음)의 부인을 만났는데 선장과 기관장은 수산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윤질규 사건 사례²⁷⁾

(1) 사건개요

윤질규는 1976. 8. 30.경 제3신진호 기관장 조수로 승선하여 동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던 중 선장 이봉만 등 23명과 함께 북괴경비정에 피납되어 45일이 지난 동년 10. 14.경 속초항에 귀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²⁸⁾

(2) 주요 진술내용

윤질규는 “1976년 선장 이봉만 등 선원 23명과 함께 제3신진호에 승선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잡고 속초로 귀향하던 중, 갑자기 강한 비바람 속을 뚫고 나타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다. 납치될 당시 나는 선장 대신(선장 및 선원들은 취침) 키를 잡고 있었다. 북한 경비정이 나타나자 나는 SOS를 쳤으며, (구조신호를 받은 해경으로부터) 비행기를 띄울 것이니 계속 남하라는 무전을 받았다. 하지만 북한경비정을 따돌리지 못하고 납치되었다. 이후 귀환하여 실제로 헬기를 띄웠으나 이미 납치된 뒤였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27) 2009. 7. 1. 진술청취.

28) 윤질규는 1984.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반공법위반으로 다시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동년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동년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1985. 2. 26.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8년 동안 수형생활을 하다 가석방되었다.

윤필규는 “제3신진호 승선자 모두가 귀환 즉시 속초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이어 속초경찰서 옆에 일자로 늘어진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여관(여인숙)에 1명씩 분리 구금되어 약 1개월 정도 수사를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북한해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며 심심하면 주먹으로 뺨을 때리거나 볼펜을 손가락에 끼우고 밟는 등 고문을 하였지만 계속 버티자 석방시켜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라) 김영수 사건 사례²⁹⁾

(1) 사건개요

김영수는 1971. 8. 29.경 동해상에서 제2승해호에 승선하여 오징어를 잡던 중 납북되었다가 1972. 9. 7.경 귀환하여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다³⁰⁾.

(2) 주요 진술내용

김영수는 "제2승해호를 타고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를 잡아 귀환하던 중, 배의 선미에 친구 김본수, 심운섭 등 서너 명과 함께 앉아 있다가 선장에게 '아제비, 여기가 어디요'라고 물었더니 '저 등대가 인구 등대(양양 아래쪽에 있음)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가 너무 짙어 어선을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선장의 지시로 엔진을 끄고 정지한 다음 안개비도 피할 겸 대부분 취침을 하였다.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선실 밖으로 나와 소변을 누고 선장실 옆에 앉아 있었더니 선장(친구의 아버지임)이 '니는 잠이 안오냐, 아직 밤 12시도 안되었다, 들어가서 자라'하면서 차고 있던 시계를 보여 주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이 아버지 생일이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잠이 오지 않는다. 아버지

29) 2009. 7. 3. 진술청취.

30) 김영수는 1975.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장기복무를 결심하고 하사관에 지원하였다가 납북된 당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내려와 군사기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군내 침투한 간첩혐의로 1976. 다시 37사단 보안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간첩죄로 10년형이 확정되어 만기 복역하고 출소하였다.

드리려고 복어도 잡아 놓았다’ 등 약 30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 속에서 불빛이 2~3차례 깜빡이더니 따발총 소리가 들렸다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갑자기 이북 배(남한의 고기배인 트롤선처럼 생겼으나 단지 빠르다는 것만 다름)가 나타나 저희 배에 붙이더니 도롯지(인민군 모자)를 쓴 사람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밧줄을 우리 배에 던지고는 ‘빨리 걸라우, 걸라우’ 라고 말했으나 나와 선장은 어안이 병병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관장 박정태가 언제 선실에서 나왔는지 기어서 배 선미로 가더니 밧줄을 선미에 걸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배를 끌고 갔는데 그 시간이 불과 2~3분도 안 걸렸다. 아침에 북한 장전항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영수는 "북한에 약 1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귀환 하였다. 귀환시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한국 함정에 넘겨졌는데, 한국 함정은 즉시 저희들을 속초항으로 데려갔고, 속초항에서는 경찰관들이 시청으로 저희들을 데려갔다. 당시 시청에는 속초 지역 선원들만 수용되었는데 약 100여 명이였다. 수사관들은 시청에서 한 사람씩 불러내어 한일여인숙과 현대여인숙으로 데려가 조사를 하였다. 나도 한일여인숙과 현대여인숙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형사들이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꿇어앉으라고 하더니 북한에서 지령 받은 것에 대해 말하라고 하였다. 내가 지령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더니 곧바로 불을 피우기 위해 쌓아둔 장작개비를 가져와 무릎이고 어깨고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팼으며, 주먹으로 뺨을 때렸고, 온몸을 발로 찼는데 그런 일은 조사를 받는 동안 매일 반복되었다. 당시 여인숙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찬가지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한 수사관들이 저에게 중점적으로 물었던 것은 북한에서 생활했던 일과 지령 받은 사항을 자백하라는 것과 선원들이 서로 모의해서 북한해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령 받은 것이 없고 남한해상에서 연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죽게 맞았다. 하도 많이 맞다보니 견디지 못하고 수사관들이 작성해온 조서에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다. 그리고 경찰관

이 작성해준 조서를 베껴 적었다. 다른 선원들도 수사관들이 작성하여 가져온 진술 조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수사관들이 하라는 대로 무인을 하였으며,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오래 되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으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나중에 속초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김용태 사건 사례³¹⁾

(1) 사건개요

김용태는 1971. 9. 26. 강원 명주군 주문진항 소속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 대복호에 승선하여 울릉도 북방 근해에서 조업 중 북괴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약 1년 후인 1972. 9. 6.경 강원도 속초항으로 귀환하여 조사를 받고 같은해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³²⁾.

(2) 주요 진술내용

김용태는 “주문진으로 시집간 누나 집에 들르러 갔다가 누나의 권유로 매형이 선장으로 있던 오징어잡이 채낚기 어선 대복호에 선원으로 1971. 9.경 처음 배를 탔다. 나와 함께 대복호에 승선한 선원은 이순출, 정석환, 이상철, 김진용, 정태환, 조학야, 강병기, 이정덕, 조해웅, 김춘길, 이용주 등 20여명이다. 당시 내 나이는 14살이었다. 배를 처음 타고 울릉도 근해까지 오징어를 잡으러 갔었기 때문에 배멀미를 심하게 하였다. 오징어를 잡던 중 태풍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귀항을 하는데, 출발할 때 잔뜩 끼어있던 안개가 걷힐 즈음 나이 먹은 선원들이 선장에게 ‘지형을 보니 어로저지선부근 가까이 온 것 같다. 내려가자’ 고 하였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

31) 2009. 7. 16. 진술청취.

32) 김용태는 1984.경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다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1984. 8. 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의 징역 17년 및 자격정지 17년을 선고, 1985. 1. 14. 서울고등법원의 징역 14년 및 자격정지 14년 선고, 1985. 4. 9.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만기 13일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오는데 갑자기 북한 경비정 세척이 총을 쏘면서 다가와 북한으로 납치해 간 것이다. 이후 북한에 1년간 억류되어 있다가 1972. 9.경 속초항으로 귀환하였다.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해주에서 함께 지낸 명성호, 고흥호 선원(북한에 가보니 먼저 잡혀와 있었음)들과 우리와는 다른 곳에서 지낸 선원들도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김용태는 “귀환 즉시 속초시청 회의실(체육관)로 전원 연행되었는데, 수사관들은 1명씩 불러내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한 방에 1명씩 넣어두고 조사를 하였다. 나를 조사한 수사관은 2명이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선원들이 합의하여 북한해상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경비정에 의해 피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며 수시로 각목으로 두들겨 패더니 나중에는 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 견학한 곳, 지령 받은 사항을 사실대로 자백하라고 두들겨 팼다. 그리고 며칠 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조서를 가지고 와서는 무조건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으며, 자술서도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한번은 수사관이 ‘네가 이북의 실정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으니 국가 정보에 도움이 되도록 사실대로 진술해라’ 라고 말하더니 헬기에 태워 서울에 있는 중앙정보부로 데려 갔다. 그리고 곧이어 미군부대로 다시 넘겨져 조사를 받았는데 미군부대에 있을 때는 매일 담배도 한 갑씩 주었고, 조사가 끝날 때는 청바지도 주어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속초 경찰서로 돌아왔는데, 경찰관들이 담배와 청바지를 모두 압수해 가버렸다. 그리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바) 자료조사

(1)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

치안국과 강원경찰국 등에서 작성한 각종지시 및 보고문건을 통해³³⁾, 납북되었다가 1969. 5. 28.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23척, 150명의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를 보면,

33) 국가기록원(공개서비스과-1226, 2007. 3. 4)에서 강원도경찰국에서 작성한 「납북귀환어부」 문서를 입수하였다.

1969. 5. 28. 12:00경 북한방송에서 납북된 어부들을 남하 귀환시키겠다는 방송을 하였고, 동일 15:30 납북귀환어부 23척, 150명은 북괴지역 남해항을 출발 남하중 동일 20:00경 남방한계선 어로저지선부근 해상에서 해군 709함 및 해경 307호와 고성경찰서 경비정인 금강호에 예인되었고, 동일 24:00경 거진항에 귀항하였다. 선적지 별 선박 및 선원현황은 고성 12척 81명, 속초 3척 19명, 강릉 5척 29명, 경북 영덕 3척 21명으로 전체 23척 150명이었다.³⁴⁾

거진항 관할서인 고성경찰서는 동년 5. 29. 07:00에 이들 어선을 해군 함정으로부터 인수받아, 선박 일체의 검색을 마치고 납북귀환어부들이 휴대 귀환한 적성물자를 몰수하고³⁵⁾, 고성군교육청에 80명, 고성군농촌지도소에 70명을 분산 수용한 후, 강원경찰국 산하 지방경찰서에서 차출한 합동심문요원과 동년 5. 30. 도착한 치안국 심문반 3명 그리고 군(CIC) 및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함께 동년 6. 10.까지 합동심문을 하였다.³⁶⁾

당시 강원경찰국 작성(1969. 5. 30.) 「귀환어부 심문철저지시」에는 “고성경찰서장은 심문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간첩 색출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며, 간첩을 색출하는 심문관에게는 상당한 보로금³⁷⁾을 지급계획인바, 본 취지를 주지시켜 심문에 철저토록 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성과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합동심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납북귀환어부들은 미군부대로 보내져 조사를 받았

34) 당시 납북귀환 선박 현황으로 납북선적 23척, 납북인원 167명 중 귀환인원 150명, 미귀환인원 17명이었다.
35) 당시 납북귀환어부들이 소지한 적성물자는 백미 150포와 건명태 398속, 과자 46상자, 담배 7갑, 통조림 2통, 사과 50개, 식빵 150개, 떡 100개, 성냥 9갑, 인삼주 4병, 만년필 2개, 물통 4개였다. 1969. 6. 5. 고성경찰서에서 작성한 「적성물자 처리품진」에서 “백미와 건명태는 귀환당시 많은 비에 침수되어 계속 부패하여, 백미는 현지에서 환가처분하고, 건명태는 취식 불능임으로 현지에서 처분토록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정에 품신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6) 강원경찰국 명의로 동년 5. 30. 작성된 「귀환어부 심문철저 지시」문건이다. 당시 단계별 심문계획에 따르면 “1차 심문기간은 동년 5. 29 ~ 6. 5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심문하고, 2차 심문기간 동년 6. 6 ~ 6. 8까지 1차 심문 끝내고 각 심문요원의 의견을 종합 특수지령 받은 자 등을 재심하고 밀령을 받고 잠입을 기도하는 간첩을 색출하고, 3차 심문기간 동년 6. 9 ~ 6. 10까지 공작여건을 개척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치사항으로 “신병처리(선박 및 적성물자 포함)는 중앙정보부 조정에 의하여 선적지 관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 입건 예정으로 종합심문분석 보고서 작성과 신병처리 조정 상신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37) 1건당 150,000원으로 적었다가 두 줄로 굵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 지우고, ‘상당한’ 문구로 변경 기재되어 있다.

고, 38) 이어 선적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신병 인계되어 2차 조사를 받았으며, 소관 지방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신병이 처리되었는데 전원 재판에 회부되어 수산업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39)

(2) 상기 납북귀환어부들이 반공법 및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968. 10. 31.자 고성경찰서 작성 「납북선박 발생보고」에 의하면 “1968. 10. 30. 13:30경 명태잡이 조업 중이던 ‘용명호’ (선장 김대호 외 7명), ‘영창호’ (선장 이민하 외 8명), ‘백악호’ (선장 김병근 외 5명)가 납북되었고, 동일 14:50경 ‘어제호’ (선장 전만수 외 8명), ‘길성호’ (선장 강석돌 외 7명)가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1969. 5. 28. 돌아온 23척 150명에 포함되어 어거진항에 귀환하였다.

상기 납북귀환어부들은 선적지 관할경찰서에서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반공법 제4조제1항⁴⁰⁾, 국가보안법 제5조제2항⁴¹⁾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수산업법 제15조⁴²⁾, 동법제72조제1호, 반공법 제6조제1항⁴³⁾, 동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⁴⁴⁾, 형법제30조⁴⁵⁾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46) 그리고 이들은 모두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38) 1969. 6. 9. 내무부장관이 강원경찰국으로 보낸 전화통신문인 「귀환어부 전략 심문」에 의하면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해 502수용소에 입소시켜 심문케 할 것을 조정하니 시행토록 할 것이라는 지시와 수송방법은 미502대대항공기. 심문기간 약 2주일”로 기재되어 있다.

39) 이들 중 선장은 대부분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 선원들은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을 받았다.

40)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등)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개정 1963. 10. 8).

41)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42) 수산업법 제15조(어업의 제한조건)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할 수 있다(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43) 제6조(탈출, 잠입) 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997호 1968. 3. 18 일부개정).

44) 제11조(자격정지) 본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국가보안법 제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45)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0293호 1953. 9. 18 제정).

46) [상기 납북귀환어부 선고결과표]

선박명	성명	형량
용명호	선장 김대호	징역1년 자격정지1년

확정되었다. 47)

그러나 고성경찰서에서 1968. 10. 30. 작성한 「납북선박발생보고」에는 “12 × 37R 전방관측에 의하면 1968. 10. 30. 13:45 현재 아어선 2척이 어로작업 중인 것을 북괴 쾌속정 2척이 나타나 납치하여 북상중인 것을 아육군 65포대에서 105미리포 4발을 발사하였으나 명중되지 않고 계속 북상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 작성된 「납북어선 발생보고 3보」에는 “동일 08:30경 목격자 북성호 선장 김자하 외 7명은 어로저지선 남방 지점에서 어로작업 중 아선박 2척이 북괴쾌속정에 의하여 포위 선회하다가 북괴쾌속정 2척이 추가로 달려와 동 아선박 2척을 나포 북상하는 것을 보았다” 고 귀향 후 신고하였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 “당일 조업 중인 97척 어선에 대해 귀환조치 내렸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전부터 고성경찰서는 상기 납북귀환어부들이 월선조업이나 북한해상으로 탈출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사례로, 1968. 11. 9. 동아일보 7면에는 “7일에 이어 8일 또다시 명태잡이 우리어선 7척과 어부 52명이 북괴쾌속정에 의해 납북됐다. 8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동해어로저지선근해 수원단에서 2백여척이 명태잡이 하던 중 북괴쾌속정 4척이 나타나 기관포를 난사하면서 포위 1차로 2척을 납북, 일정한 수역까지 끌고가 밧줄로 어선과 어부들을 묶어놓고 다시 공격을 가해 또 5척을 납북한 북괴 쾌속정은 어로지도선 무궁화 13호의 납북을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라고 보도되었다.

	선원 김득수, 김봉근, 이억출, 정복봉, 김형국, 김태길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영창호	선장 이민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선원 장남두, 김재문, 박기종, 박행종, 박형식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백악호	선장 김병근, 선원 정정길, 윤광국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선원 김용운, 우천수, 김상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어제호	선장 전만수	미귀환
	선원 김후봉, 김재한, 서창식, 이봉남, 이충계, 천봉술, 이명근, 최영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길성호	선장 강석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선원 박철주, 김명수, 유철일, 이화선, 최귀석, 정순원, 박우용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47)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수산업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판결문에는 위 5건 외 1968. 10. 30. 납북된 기성호(선장 이신규외 선원 황봉춘, 김대진, 김인도, 오은재), 해진호(선장 옥을수, 선원 옥문흥, 함영설, 김용봉, 김용이) 어선 2척이 추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또한 1969. 5. 28. 귀환하여 조사를 받고 처벌받았다.

위 사항에 대해 고성경찰서에서 1968. 11. 8. 작성한 “납북선박 발생보고(제3보)”에는 “기보한 납북선박은 10척이 아니고, 7척 동선호(선장 황원식외 7명), 왕양호(선장 김병학외 5명), 대양호(선장 김용환 외 6명), 수진호(선장 황복석 외 7명), 영덕호(선장 고명봉외 6명), 대동2호(김재수외 7명), 송학호(선장 이우호외 7명)이다”고 정정 되어있다.

상기 납북된 어선들 중 “동선호”를 제외한 나머지 어선6척과 승선한 선원들은 1969. 5. 28. 귀환한 23척 150명과 함께 거진항으로 귀환하였으며,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받은 후 수산업 위반 및 반공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고성경찰서에서 1968. 11. 8. 작성한 문건에는 “고정2061-1510호로 기보한 납북선박 발생 상황에 대하여 해군 파견대장으로부터 재확인된 사실로 1차 11. 8. 09:50 북위38도 36분 20초, 동경128도 30분 20초 어선1척이 납북, 2차 11. 8. 10:05 북위 38도 36분 20초, 동경128도 29분 20초 지점에서 어선 2척이 납북, 3차 11. 8. 10:25 북위 38도 33분 08초, 동경128도 33분 지점에서 어선 4척이 납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어로저지선은 북위38도 34분 45초, 북방한계선은 38도 35분 45초이었다. 따라서 3차로 납북된 어선 4척은 어로저지선 아래쪽 남한해상에서 북한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음이 기록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나머지 3척 또한 어로지도선의 지도아래 200여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던 중 나포되었으므로 설사 월선조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국의 목인 하에 월선조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납북귀환어부 재심 현황

번호	사건 관련자	발생년	죄명	1심 형량	수사기관	1심 법원	진화위 관련	재심 무죄	비고
1	백남옥 외	1968	반공법,	징자 7년	전북도경(3.1공사)	전주지법	2008.06.08	2012	위도

	5명		국보, 간첩, 불고지		중정전주분실 /부안서	정읍지원			
2	임덕택, 임대택 등	1968	고무찬양 수사, 반공법, 간첩	징자 5년	전북도경 /군산경찰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미신청	2014	간첩 무죄
3	태영호, 강대광 등	1969	탈출죄 적용	징자 1년 6월 집유 3년	여수경찰서 /부안경찰서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6.12.05	2008	위도
4	김호섭, 이동근 외	1969	간첩, 반공법, 국보법	징역 15년	강릉103보안대	사형구형 강릉지원	미신청	미확인	보안대
5	최만춘	1969	탈출, 잠입, 간첩죄	징자 10년	전북도경. 195일 불법감금, 전기교문 6회	전주지법	2010.01.19	2014	개야도
6	김익순 등	1970	간첩, 국보법	징자 7년	강릉308보안대	강릉지원	미신청	2014	-
7	이강주 등	1972	간첩, 국보법	징자 7년 (구형 사형)	전북도경 대공분실	군산지원	미신청	2013	육구군 미면
8	임봉택 외 2인	1972	간첩, 국보법	징자 7년	군산경찰서	군산지원	2009.04.20	2011	개야도
9	박월림	1973	간첩, 국보법	징자 10년	해군목포보안대 (해양공사) /중정 전남지부	목포지원	2010.06.30	2012	피해자 무학자
10	김성학, 이청일	1973	고무찬양 수사	징자 2년 6월	여수경찰서	순천지원	2010.06.30	2012	거문도 승해호
11	신평옥	1973	월선조업 피랍 어부 간첩죄	징 1년 6월 고법 환송	여천경찰서	간첩무죄 (2심) 대법유죄(3심)	대법원 (한환진)	미확인	대법원 판례
12	백윤중	1974	고무찬양, 간첩 예비, 반공법	징자 2년 국보, 반공	전북도경 대공분실	전주지법	미신청	2013	간첩무 죄(2심)
13	김영수	1975	간첩, 보안법	15년	보안대서빙고, 현역복파공작원 (HID)거절	남북 당시 중학생	미신청	미확인	승해호
14	이길부	1976	간첩, 보안법	징자 10년	군산경찰서	군산지원	미신청	2014	개야도
15	정규용	1976	간첩, 보안법	징자 15년	경기도경 대공분실, 이근안	인천지청	고문호소 무시	2013	유명 인사들
16	오형근	1976	안희천, 안장영, 황용운	미확인	경기도경, 이근안	판검사, 변호사 겸칭	미신청	미확인	불응도
17	안희천	1977	185일 구금	징자 15년	경기도경, 이근안	인천지원	미신청	2013	미법도

18	안장영	1977	간첩, 보안법	사형	경기도경, 이근안 다람쥐공작(경우현)	인천지원	사형선고 (1심)	2014	미법도
19	김이남	1977	김성학 동승	무기 (1심) 징자 20 (2심)	목포경찰서 (정보과)	목포지원	2010.06.30	2014	승해호
20	박우용	1978	수사관 공작	징자 7년	강원도경 /고성경찰서	강릉지원	미신청	2014	-
21	태영호 강대광 외	1978	탈출, 간첩, 찬양고무	징15, 자10	부안서/전북도경	정읍지원	2007.06.19	2008	위도
22	배일규	1979	간첩, 보안법	징자 5년	중앙정보부	연합뉴스, 2015.04.06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
23	이성국, 강경하	1981	104일간 불법 감금	무기	서산경찰서 /충남도경대공분실	서산지원	2010.06.30	2013	제3 명성호
24	김영일	1982	45일간 불법 감금	징자 15년	광주505보안대	광주지법	2010.06.30	2012	-
25	황용운 한금분	1982	납북어부+ 월북자사건	징7, 징5, 징2(집3)	경기도경, 미나리공작(경우현) 안기부 본부	인천지원	미신청	미확인	미법도
26	정영 정진영	1983	납북어부+ 월북자 /태왕성공작	무기	안기부 인천분실. 본부 무혐의처리사건	인천지법	2009.05.18	2011	미법도
27	이상철	1983	간첩	징자 17년	창원502보안대 /안기부 부산분실	창원지법	2010.01.12	2012	대복호
28	윤질규	1983	54일 불법 감금	징자 10년	고성경찰서	강릉지원	2010.06.30	2012	-
29	김춘삼	1983	막걸리 보안법	징자 2년	강원도경 대공분실	강릉지원	미신청	2013	승해호
30	서창덕	1984	국보, 찬양고무 3차례 처벌	징역 10년	전주510보안부대. 김용성 /안기부 전주분실	전주지법	2007.11.27	2008	개야도 무학자
31	김용태	1984	13세 승선 국보법	징자 7년	강릉보안대	강릉지원	미신청	2014	대복호
32	안정호	1985	고문 주장 (2심 불고지죄만)	징자 10년 (1심)	강원도경 /고성경찰서, 이근안	강릉지원 2심간첩무죄	미신청	2012	남진호
33	이병규	1985	장성광업소 노조 관련	징자 14년	강릉107보안부대	강릉지원	2010.06.30	2012	노조 연관성
34	정상근	1985	간첩, 국보법	징자 7년	전주510보안부대/ 안기부전주분실	전주지법	2007.09.18	2009	개야도
35	김성학	1986	김이남과 동일 방식 조작	무죄 고문경관 유죄	경기도경(이근안) 6차례전기고문고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장용국판사 (1심)	1986 (1심무죄)	승해호
36	여덕현	1986	-	-	보안사	2심 무죄	-	미확인	-
37	강종배	1986	안정호와	징역 2년	고성경찰서	고문인정,	간첩 무죄	미확인	남진호

			동일 방식 조작			고무찬양 유죄			
38	박우용	1978	22일 불법 구금, 고춧가루 물고문	징역 7년	고성경찰서	강릉지원	미신청	2014년 대법원 재심무죄 확정	
39	김흥수	1977	30여일 불법감금, 물고문	징역 15년	인천경찰서	인천지원	미신청	2015년 서울고등 법원 무죄 확정	
40	남정길 등	1968	40여 일간 불법 감금, 물고문	징역 3년	군산경찰서	군산지원	미신청	2019년 무죄 확정	
41	최남옥 등	1968	한 달여간 감금, 고문	징역 3년 등	서천경찰서	홍성지원	미신청	2018년 무죄확정	
42	김봉호 등	1972	한 달여간 감금, 고문	각 징역 1년 등	속초경찰서	속초지원	미신청	2020년 무죄 확정	

** 이후 김춘삼, 김성학, 이성국 등 3명의 재심이 12월 10일 신청될 예정

상기 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확인된 6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납북귀환어부들은 귀환 후 수년이 지나서 다시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간첩으로 처벌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수사기관은 구체적 물증이나 혐의도 없이 상기 납북귀환어부들을 연행하였고, 구속영장도 없이 짧게는 30여일부터 길게는 6개월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사건을 조작하였다. 따라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 일부는 사망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현재까지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들의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으며, 자녀들은 학교도 다니기도 힘들었고, 설사 자녀들 중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좌제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이혼을 하는 등 가정생활이 파탄 났으며 현재까지도 자녀나 형제들과 연락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재심을 하고 있으며, 과거 선배 법관들이 물증도 없이 자백만을 근거로 간첩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⁴⁸⁾.

그런데 상기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람들은 민가협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위원회의 존재를 전해들은 사람, 그리고 가족 중에 관공서에 근무한 사람이 있는 경우 등이다. 즉 간첩사건으로 처벌받은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몰라 진실규명 신청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⁴⁹⁾

위 표를 보면 진실화해위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모두 40건에 이른다. 이중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에 이른 사건은 모두 16건이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미신청 사건은 24건이다. 이는 국가기관에서의 과거사 조사 신청기간과 조사기간이 생업에 종사하는 어촌 등 도서지역에 까지 정확하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4. 납북귀환어부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사례에서 본 해결 방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적용은 장기간 국가 시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정전 이후 1986년 이전까지 매년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하여는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조차 읽지 못할 정도의 사회적 약자인 납북어부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양상이 심각하다 할 수 있다.

48) 2009. 11. 13. 경향신문을 보면 “군산지청은 서창덕씨가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검토한 뒤 이례적으로 ‘개시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군산지원 역시 신속하게 재심을 진행했다. 검사는 재심 재판 논고에서 ‘이미 24년이 지나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로서, 한 사람의 검사로서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심 선고에서 재판부도 ‘본 법원의 무죄 판결로 그동안 가졌던 심적 고통에 자그마한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도”하였다.

49) 이는 ‘3. 납북귀환어부 기초사실조사 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과거에도 납북귀환어부들은 고립된 섬마을이나 해안마을에 거주하였고, 대부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회적 안전망 테두리 밖에 노출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피해는 국민적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이들의 피해는 더욱 크게 되었고 현재 국가기관에서의 조사 역시 이들에 대한 구제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마을에서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관련 간첩사건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성,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피해를 입혔으며, 그 규모가 서해와 동해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라는 점에서 잘못된 법집행으로 인한 국가폭력피해를 바로 잡아 이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여 국가공권력의 안정성을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사건관련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사망한 상태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급한 법 제정을 통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실규명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국가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법의 공정한 집행과 국가의 과거사 반성은 지역과 계층에 차별을 둘 수 없다. 모두가 공정하게 누려야 할 과거사 정리 기회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다면 뒤늦게라도 다시금 이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인력이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신청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집단 사건, 혹은 직권사건으로 일률적이고,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느냐는 점이 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2만여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비해 인력이나 기간을 볼 때 특별히 나은 조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3년이라는 위원회 종료 시한을 앞두고 납북어부 사건의 전수를 조사할 수 있느냐

냐는 문제가 있다. 얼마 전 만난 피해자 A 씨는 진실화해위원회 담당조사관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접수되어 사건 조사가 신속히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렇게 많은 사건이 밀렸다면 3년 동안 전부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스런 말을 했다. 조사의 기간을 볼 때 이제 2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을 한시적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한정된 조사기간으로 인해 결국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불법감금, 가혹행위, 월선 여부 등 단순 인권침해 결정에 급급할 수 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평가, 정치, 언론 등의 책임 등에 관한 것은 다뤄보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루어볼 때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는 4.3 사건이나 5.18광주민화운동, 여순 항쟁의 전례와 같이 특별법을 통한 전수조사, 포괄적 진실규명결정, 배상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월선 여부와 마찬가지로 어로저지선의 월선 여부 역시 당시 승선했던 피해자 어부들 이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어로저지선을 월선한 혐의로 처벌한 수산업법 위반 역시 책임의 소재를 납북어부 피해자들에게 물어 처벌한 것은 불합리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당시 납북귀환어부들을 처벌했던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무효화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에서는 ‘조작간첩피해자 지원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 조례에는 피해자 조사, 의료 지원, 기념사업, 생계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조작간첩피해자의 발굴 및 채록 작업 예산을 신청,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조례 과정에서 피해자의 범위 즉,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제주의 경우, 조작간첩피해자를 개인, 또는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들까지를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된 피해자들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납북귀환어부의 경우도 납북귀환된 피해자들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확정판결로 무죄가 된 피해자들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납북귀환어부 피해 자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귀책된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를 조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6. 마무리하며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는 진실규명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사과, 사죄를 받고난 뒤 보상이나 화해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백 건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났고, 그때마다 국가의 사과와 화해를 권고했지만 제대로 된 국가의 사과와 화해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과와 화해의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문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회복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피해자를 언제라도 범죄자, 또는 전과자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광주항쟁이나 4.3사건 피해 역사를 왜곡했던 보수단체를 통해 충분히 보아왔다. 피해자들의 목적은 물론 사법적 명예회복에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 회복이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